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조준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직접 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자체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A검사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검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A검사장 직접 검찰 착수 예정
'검찰 자체 검찰 공정성 인정못해' 판단
A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도

통상 법무부 검찰은 검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자체 검찰 후 2차적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상황에 한해 직접 검찰에 나선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접 검찰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검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명한 경우' 직접 검찰에 나선 수 있다는 검찰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추 장관이 검찰 내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검사장

에 대한 직접 검찰을 지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 장관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직접 검찰 착수와 동시에 A검사장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A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선의 수사지휘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뉴스스

'비상대기' 민주 오늘 본회의 추진

원포인트 예결위원장 고민
김태년 "추경 처리 위해 돌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기 위해 의정실로 들어오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비상대기를 선언하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자당 몫인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 외에 미래통합당 몫으로 예정키로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원포인트'로 가져와 3차 추경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는 것 만큼이나 제때 쓰이도록 신속히 심사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민약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갈기의 끝수를 부린다면 민당은 단호히 행동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여당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장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일성은 대북정책과 정의기억연대 국정조사 추진이었다. 엄청난 시기에 국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야당 원내대표의 복귀 일성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를 계기로 원 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이날 "우리는 상임위 배정을 잠정적으로 해서 (야당이)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상임위 구성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 개의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안한다는 것은 국회에 복귀한 게 아니잖나.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국회 복귀 의미는 도대체 뭐냐"며 주 원내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통합당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3일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부터는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신 통합당에 주려했던 예결위원장을 '원포인트'로 가져와 3차 추경 처리라는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다시 내주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이날 정책조정회 비공개 부분에서도 원내지도부가 26일 남은 민주당 몫 5개 상임위원장에 더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결위원장만 선출해 3차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게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의 남은 5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박 의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뉴스스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김기영 도의원 발의 '전북도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 통과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바 특

히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 경제성장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지원 등 배려적 정책과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재정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가 인구정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자는 형태로만 그칠 것이 아닌 산업기반 형성, 주거단지 조성 등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경영위기 OCI 군산공장 정부 지원'

도의회 나기학 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처한 군산 OCI 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OCI 군산공장 지원 촉구 건의안'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전기료 부담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OCI 군산공장에 대해 전기료 감면 또는 이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지역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에 OCI 군산공장마저 가동중도에 나서며 지역에 또 다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부터 군산에 터를 잡은 OCI는 주력 생산품이었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생산 공정에서 전기이용 과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생산원가의 30%를 전기료로 부담해 왔다.

독일과 중국 등 경쟁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전기료 부담은 제품가격 경쟁력 상실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결국 폴리실리콘 사

업 대부분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사인 세계 1위 기업 독일 Wacker 사의 경우 생산과정의 전기료를 각종 기금이나 부과금 등의 형태로 면제받아 실질적으로는 지역 전기요금의 25% 수준의 전력료만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신생기업 TBEA, Dage 사는 지방정부 보조금 등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의 치킨게임에서 최근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에 밀려 국내 1위 태양광 소재 기업이었던 OCI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807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2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OCI는 지난 5월 말부터 또 다른 폴리실리콘 시장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을 재개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보다 더 높은 순도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 원가부담이 큰 상황이다.

나 의원은 "어떻게 재개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마저 곧 철수할 수도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료 인하 혹은 부과금 면제와 공정개선 지원을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에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7시
전주 흥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 진흥원
주 관 | (사)전북문화 진흥원
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3-9700